366억 들여 26개 맞춤형 사업…출산율 1.5명 목표

전남도 '2022~2026년 저출생 극복 대응계획' 뜯어보니

혼인·국제결혼 급감 출산률 뚝
청년층 귀농·인식 변화에 기대
출생친화환경·출산·양육 지원
3개 분야 다양한 정책 추진

'희망 출산율 1.5명 달성!'

전남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360억원을 투입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달성하겠다고 내놓은 합계 출산율 목표치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02명.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전년도(2020년) 1.15명에 견줘 11.2% 줄어든 것으로 감소 폭도 전국에서 가장 컸다. 합계출산율 1.5명은 지난 2015년(1.55명) 이후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던 수치다.

출산율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급감했다. 2019년 7413건에 비해 2020년에는 6365건으로 14.1% 줄었고 지난해에도 6201건에 그쳤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전남지역의 경우 국제결혼 감소 폭도 컸다. 지난 2019년 854건이던 국제결혼 건수는 2020년 496건으로 무려 41.9%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98건으로 19.8%가 줄었다.

전남도는 그러나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단순한 출산 지원이 아닌, 취약한 출산·육아·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 친화적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등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펼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청년층 귀농 가구수가 2020년 1102가구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점 등 청년층의 귀농·귀어·귀촌이 매년 증가하는 점도 출산율 목표 상향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많아"=전남도는 지난 3월 시·군 청년협의체 회원·청년센터 직원 등 20~40대 남녀 687명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혼의 경우 전남지역 청년 56.1%가 '해야 한다'고 답해 통계청 사회지표조사(2020년) 때 수치(51.2%)보다 높았다.

특히 희망하는 자녀 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0%가 '2명 이상'으로 답했다. 2명이 52.6%, 3명 이상이 24.4%였다. 전남도는 전국 대상 설문조사에 비해 30% 이상 높았다는 점에 주목,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정책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관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여성을 배려한 출산정책,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돌봄 친화 사회·직장문화 조성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또 이들은 저출생 요인으로 출산·양육·교육 등 경제적 부담을 꼽는 경우가 73.5%로 가장 많았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답한 청년들도 49.1%에 달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지원(58.2%)을 꼽았고 자녀 양육비 지원(54.2%), 안정적 일자리 제공(42.2%)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23.3%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정책과 관련, '저출생 개선 효과 없음'이라고 답했다.

◇저출생 극복 위해 366억 들여 26개 사업 추진=전남도는 설문조사로 드러난 청년 세대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출생친화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출산가정 양육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26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출생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지역 기관·단체들과 연대,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면서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한편, 여러 기관에서 나눠 지원하고 있는 임신출산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맘편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로는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5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확대 등 이용률 제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시술비 추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9개 정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또 출산가정 양육 지원 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지급 ▲2자녀 이상 둔 가정에 다자녀 행복카드를 발급해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혜택 제공 ▲3자녀 이상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지원 등 14개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외 1만 1238명(2018년)→9738명(2020년)→8400명(2021년) 등 매년 1000명씩 줄고 있는 출생아 수, 전남지역 53개 산부인과 중 12개 병원만 분만이 가능한 취약한 의료 인프라 등을 감안해 '출산·산후조리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 일손부족 해결사 역할 톡톡

1만4000대…임대료 50% 감면

값비싼 농기계를 부담 없이 빌려 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값비싼 농기계를 구매하는 대신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며, 전남 21개 시·군에 79개소가 설치됐다. 보유 장비는 밭농업 농기계 1만1029대, 논농업 농기계 2652대 등 총 1만3681대다.

임대료는 농업기계 가격에 따라 산정하며, 오는 6월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전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 감면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릴 수 있는 땅속작물 수확기로 마늘을 수확하면, 평균 작업시간은 10a당 25분으로 노동력과 인건비를 기존 대비 80%가량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 전남도는 올해 농업의 기계화로 일손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분소 설치·증설 5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22억원,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60억원 등 132억원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면세유 끊기고 수입 수산물 봇물 CPTPP가 뭐길래…어민들 불안

국회서 '위기의 수산업…' 토론회
협정 타결땐 수산물 가격 하락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이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CPTPP에 관한 입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수산업 붕괴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경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2019년 기준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12.3%를 CPTPP 회원국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수산강국인 중국·베트남·페루·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산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식 돔, 방어는 높은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CPTPP 가입 시 국내 해당 품종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주장이었다.

김봉태 부경대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는 일본·베트남 등의 수산물 수입량 증가로 향후 15년 간 연평균 69억~72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으로 국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할 경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생산 피해도 우려했다. 한국은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하지만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회원국의 만장 일치가 필요해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수산보조금 폐지 우려도 나온다. CPTPP는 수산업 남획과 과잉생산에 기여 하는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CPTPP 가입에 따라 국내 어획량이 줄고 있는 어종 등 대부분 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 지원이 끊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어민단체들 지적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전남지역 어선을 소유한 어민들 등 2만8600여명에게 지급한 면세유는 2억8000만 ℓ로, 세금을 감면해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규모는 1858억원에 이른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닥터헬기 계류장 찾은 전남지사 권한대행 지난 9일 신안군 압해읍 닥터헬기 계류장을 찾은 문금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운항사 관계자 등과 응급환자 처치·이송현장 상황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해상풍력·수산업 상생 표준모델 개발한다

전남도, 2025년까지 192억 들여

전남도가 전북도, 목포대, 군산대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상생 공존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국비 192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해상풍력단지 예정지 내 수산생태계 영향 분석, 해상풍력 공존 양식장 설계 및 양식생산기술 개발, 공존형 수산자원 조성, 어업인 참여 수산업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본 등 48조5000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려는 8.2 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도는 신안에 해상풍력 핵심부품기업과 협력기업 450개를 유치하고,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어민의 협력과 이익 공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시설·상품 개발 지원 농식품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전남도가 혼족,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추세에 맞춰 시설 개선 및 상품 개발비 등 10억원을 들여 농식품 분야 가정간편식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는 1인 가구가 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조리나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가정간편식 시장은연평균 16% 성장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정간편식 생산시설과 설비 등 구축·개보수 비용을 도내 9개 업체에 개소당 1억원씩 총 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가정간편식을 제조·가공하는 전남지역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공모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순천 누룽지 생산업체 쌍지뜰전통식품, 곡성 김치 생산업체 옥과맛있는김치 영농조합법인, 강진 혼합장류 생산업체 다산명가㈜농업회사법인, 무안 두부 생산업체 토브식품 등이다.

오는 5월 공모를 거쳐 도내 가정간편식 우수 생산업체를 선정해 신제품과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를 통한 비대면 판촉도 강화한다. 남도장터에는 현재 40개 업체가 60여 가정간편식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말까지 80여 상품이 추가 입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